

연구논문

누가 좋은 국민인가?: 시민적 의무에 대한 인식의 구조 연구*

임동균**

이 논문은 시민성 개념의 중심요소 중 하나인 시민적 의무, 특히 좋은 시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성 인식 체계들의 다양성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4년 KGSS의 시민성 문항들을 활용하고, 태도에 있어서의 관계적 유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관관계 집단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좋은 시민이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그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4가지 집단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법제도 시민성과 연대적 시민성을 별개로 인식하는 이원 구조 집단, 대부분의 시민적 의무들을 유사한 정도로 긍정하나 정치·사회 단체 참여는 별개로 생각하는 참여제외 집단, 다양한 시민적 의무들에 대해 비교적 긍정하지만 그것의 방향성이 국내에만 맞추어져 있는 국내중심 집단, 마지막으로 법을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에는 긍정하지만, 그 이상의 적극적인 실천에는 덜 긍정하는 기본윤리 집단의 네 가지 집단이 추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시민적 의무 인식의 다양성과 인지적 구조의 특성들을 보여준다.

주제어: 시민성, 시민적 의무, 좋은 시민, 상관관계 집단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내연구과제(신임교수연구정착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0-20190157).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dongkyunim@snu.ac.kr).

I. 서론

이 연구는 시민성(citizenship)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들 중 하나인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사람들이 ‘좋은 시민(good citizen)’이 가져야 할 책임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인식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성 개념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그 내포와 외연이 변화되고 확장되어 왔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 의미는 다차원성을 지니게 되었다. 아울러 시민성의 개념과 그것의 다차원적 구성 요소들은 꾸준히 학문적, 이론적 연구주제로서 심도 깊게 연구되어 왔다. 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시민들의 책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중적 이해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깊이 있게 연구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성에 대한 이론적인 담론들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다차원적 요소들이 일반 대중들의 이해와 인식 속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좋은 시민에 대한 규범을 직접 살펴보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구분한 요소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함의 또한 가진다.

이 연구는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적 의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민적 의무 인식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개인들이 지닌 인지적 틀의 다양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관관계 집단분석 기법(correlational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기존의 시민성 관련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시민적 의무 인식의 구조와 다양성을 포착하는 것으로 관련 문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주로 이론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시민성을 구분하고 개념화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방식(inductive)으로 시민성의 범주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먼저 기존의 시민성과 관련된 담론의 지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민적 의무와 관련된 연구들에 나타나는 개념적 다차원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시민적 의무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내 줄 수 있는 방법론적 전략으로서 상관관계 집단분석을 소개한다. 이어서 이 방법론을 사용

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경험적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그것의 함의를 논의하도록 한다.

II. 시민적 의무 감각의 다차원성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시민성 개념은 마샬(Marshall, 1964)이 제시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3단계 시민권 개념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그 후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어 발전해 왔다. 시민성 개념은 20세기 후반 및 21세기에 들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에겐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특히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민·이주가 지속되고 인종적 다양성이 심화됨에 따라, 배제(exclusion)와 포섭(inclusion)의 사회적·정치경제적 논리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정체성들을 포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의 시민성이 사회권, 글로벌 시민성, 다문화 시민성, 생태시민성, 인격성의 인정(recognition) 등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최문선·박형준 2015; 조철기 2016; 호네트 2011). 시민성 개념에서 이러한 논의는 주로 시민권, 즉 시민의 권리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경제영역을 아우르는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참여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강조되었던 배경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시민의 덕성(virtue)으로서 논의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참여나 연대와 같은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이나, 전통적 규범들이 약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참여나 연대를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철학적, 개념적 자원을 활용하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민성 개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시민성이 자유주의적 요소와 공화주의적(civic republican)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거(Dagger)의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또한 그러한 이질적 속성을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Dagger 2017).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CSR을 넘어 시민성(corporate citizenship) 개념까지 연결되는 것도(Matten & Crane 2005) 시민성 개념이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에 유연하게 확장되는 그와 같은 속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민성 개념의 하위 요소인 시민적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도 다차원성과 복잡성이 나타난다. 베넷(Bennett)은 의무적 시민성(dutiful citizenship)과 자기실현적 시민성(self-actualization)을 구분한 바 있다(Bennett 2008; 이선미 2016). 전자의 경우 공동체나 국가가 요구로 하는 의무와 책임 사항들을 수행하는 종류의 시민적 의무라 한다면, 후자의 경우 개인적 목적의식, 자기표현 욕구 및 자아실현 동기를 기초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구축해 나가는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달튼(Dalton)이 말한 의무적 시민성과 관여적 시민성 구분과도 유사하다. 의무적 시민성은 사회적 규칙을 잘 준수하고 투표와 같은 공식적 제도에 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관여적(engaged) 시민성 개념은 연대, 자율성, 비공식 조직에의 자발적 참여와 같은 실천과 관련되어 있다(Dalton 2008; 진보미 2017). 다른 한편, 달튼은 그의 저작에서 ‘좋은 시민 가설(Good Citizen Thesis)’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기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청년층은 투표나 정당가입과 같은 전통적 정치참여에는 소극적이면서 선거가 아닌 시위나 청원, 보이콧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에는 적극적이라고 주장하였다(Dalton 2008). 이러한 구분은 크게 보면 선거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정치참여와 선거가 아닌 정치참여에 따라 좋은 시민의 실천을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시민적 의무의 구분으로는 에델(Eder 2017)이 2104년도 ISSP 시민성 모듈 자료를 사용하여 34개국 응답자들이 ‘좋은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9가지 요소들 각각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다. 에델은 설문자료를 주성분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두 가지 잠재적 차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해외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정치나 환경을 고려하여 상품 구매, 정치 및 사회단체 참여,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고, 둘째는 언제나 법을 잘 지키는 것, 탈세하지 않는 것, 투표하는 것, 정부의 행위를 지켜보는 것과 관련된 ‘올바름(righteousness)’의 차원이다. Gyárfášová(2017)의 경우에도 같은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슬로바키아 시민들의 응답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김석호·양종희(Kim & Yang 2013)는 철학적 구분과 경험적 분석을 결합한 형태의 연구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ISSP의 시민적 의무와 권리 문항들을 공동체주의(communitarian), 공화주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항목들로 나누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이를 크게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잠재요인으로 묶어 그것과 시민적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시민적 의무와 관련된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그 내부

의 다양성과 다차원성을 잘 드러낸다.

반덴버그(Vandenberg)가 시민성 개념을 ‘클러스터 개념’이라고 했듯이(Vandenberg 2000; Kim & Yang 2013에서 재인용), 시민성 개념은 이처럼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이론적 모델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경험자료를 활용, 시민적 의무와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의 속성을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¹⁾ 물론 시민성에서 의무나 책임 외에도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그것들을 모두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뛰어넘기에 이후의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접근에 대해 설명한다.

III. 인식과 태도의 구조에 따른 하위집단분석

시민적 의무의 내용이 다차원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시민적 의무 인식 또한 필연적으로 다양성과 이질성을 보일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인지적 하위집단(cognitive subgroups)들이 존재할 것이다. 사회학 내의 ‘문화와 인지(culture and cognition)’의 연구 흐름에서는(DiMaggio 1997), 그와 같은 서로 다른 인지적 스키마(schema)를 가지고 있는 하위집단들을 추출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지속해 왔다. 이는 제루바벨(Zerubavel)이 인지사회학(cognitive sociology)을 인지적 개인주의 관점과 인지적 보편주의 관점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면서, 루드윅 플렉(Ludwik Fleck)이 말한 서로 이질적인 ‘생각 집단(thought collectives)’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 서로 다른 인지적 도식(cognitive schema)에 기반해 있는지를 포착하고자 한 노력과 관련이 있다(Zerubavel 1997). 이러한 관점은 뒤르켐이 이야기한 집합표상이 한 사회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사한 인지적 틀을 가진 하위집단들 사이에 서로 다르게 인식

1) 이 논문에서 앞으로 ‘시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경우 ‘시민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지칭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 양해를 구한다. 이는 후자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용어 사용과 표현에 있어서의 경제성과 용이성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개념적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태도와 믿음에 있어서의 하위집단별 질적 차이를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학적 상상력에 있어 인지적 사회학적 상상력(cognitive sociological imagination)을 추구하는 것(Zerubavel 2007)이다.

이러한 노력은 경험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태도들이 개인 내부에 조직화되어 있는 방식이 개인별로 혹은 집단별로 매우 다름을 보여주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태도를 측정한 후에 나타나는 태도 제약성(attitudinal constraint; Converse 1964)의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경험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중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인지적 구조를 드러내고 집단별 차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예가 골드버그(Goldberg)의 관계적 집단분석(relational class analysis)과 이 논문에서 사용할 부티라인(Boutyline)의 상관관계 집단분석(correlational class analysis)이다(Goldberg 2011; Boutyline 2017). 이러한 방법론들은 전통적 설문조사 분석 기법들이 충분히 보여줄 수 없었던, 인지적 스키마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버그는 1993년 미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사용, 관계적 집단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의 음악적 취향이 옴니보어-유니보어, 고급(highbrow)-저급(lowbrow), 현대-전통이라는 세 가지 구분 논리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Goldberg 2011).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문화적 취향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학적 논의와 분석들이 밝혀내지 못한, 사람들의 취향이 구조화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문화사회학적 이해를 제공하였다. 발다사리·골드버그의 연구(Baldassarri & Goldberg 2014)는 같은 방법론을 미국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자료에 적용하여 미국 유권자들이 (1) 좌-우 스펙트럼에 따라 잘 조직화된 정치적 태도를 지닌 33% 정도의 ‘이데올로그(ideologues)들’, (2) 영역별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40% 정도의 ‘대안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alternatives)’, 그리고 (3) 태도의 조직화 정도가 매우 약한 약 27%의 ‘불가지론자들(agnostics)’의 3가지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존 문헌들이 개인들의 정치적 태도를 주로 좌, 우, 중도의 스펙트럼에 기초해서 살펴봄으로 인해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대중의 정치적 지형의 중요한 이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티라인(Boutyline)은 관계적 집단분석 기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상관관계 집단

분석 기법을 제시하면서 골드버그의 2011년 논문을 반박하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Boutyline 2017). 그 연구에서 부티라인은 똑같은 미국종합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골드버그와는 달리 3집단이 아닌 4집단(i.e., 옴니보어-유니보어, 현대-전통, 헤비메탈과 그 외, 컨트리와 그 외)으로 하위집단들이 추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상관관계 집단분석이나 관계적 집단분석과 같은 방법론은 한 사회 내에 공존하고 있는 서로 질적으로 다른 인지적 하위집단들을 포착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설문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비교하면, 요인분석의 경우 유사한 요인구조가 모든 개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방법론적 가정에 기초해 있다(Bergman & Magnusson 1997). 즉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과 그것들의 구조가 해당 모집단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공유된다는 관점을 암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인지적 틀의 이질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약점을 지닌다. 설문을 통해 얻어진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들을 바탕으로 모집단 구성원들의 태도를 파악하는 접근방법 또한 물론 그러한 다양성을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하다. 아래에서는 상관관계 집단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시민적 의무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IV. 연구방법

1.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2014년도 조사이다. KGSS는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을 모델로 하여 국내에서 2003년부터 실시해 온 대표적 사회조사로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그리고 2016년부터는 격년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동안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의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본 논문이 사용하는 2014년 자료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로,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7월에서 11월에 걸쳐 대면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2014년의 경우 최종 응답자는 1,370명, 응답률은 55%였다(김지범 외 2019). 2014년 KGSS에는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시민성(citizenship) 모듈이 사용되어 시민적 의무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로는 시민적 의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태도를 묻는 일련의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이들 문항들에 대한 제시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좋은 국민이 되는데 무엇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각각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매우 중요하다’에 7점을 준다면 귀하는 1점부터 7점 사이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해당 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범주는 ‘1.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7. 매우 중요하다’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설문 문항에 ‘시민’이 아닌 ‘국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시민적’ 의무 감각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항들이 국내에서 2004년부터 번역되어 사용되었는데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국민’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사용되었고,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국민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의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제시문 아래 9개의 문장들이 제시되었는데, 이 문항들이 이후의 상관관계 집단분석에 투입될 항목들로, 각각은 다음과 같다. 옆의 괄호 안에는 이후의 분석이나 해석에서 각 문항들을 지칭할 단어를 제시하였다:

- 1)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투표)
- 2) 결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다 (납세)
- 3)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킨다 (준법)
- 4)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 (정부)
- 5)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단체)
- 6)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감)
- 7) 조금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또는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 (윤리소비)
- 8) 나보다 못 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이타_국내)
- 9) 나보다 못 사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이타_해외)

이 문항들은 ISSP의 2000년도 회의에서 제안되고 2001년 회의를 거쳐 2003년 회의에서 확정된 시민성 문항들의 일부이다. 처음에 이러한 시민적 의무 감각과 관련된 문항은 시민과 관련된 권리, 정체성, 그리고 참여라는 삼조(triad) 중에서 정체

성의 하위요소로 포함되었다(Pammett 2016). 즉, ‘좋은 시민(good citizen)’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시민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가를 물어본 것이다. 이후의 ISSP에서의 논의에서는 이 문항들이 ‘시민성에 있어 의무(duties and obligations of citizenship)’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시민성 모듈에서 다루어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의 의무 외에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나 시민적 참여 등에 대한 문항들도 같이 분석을 할 수 있으나 ‘시민적 의무’ 내에 존재하는 다차원성과 다양성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논문에서는 의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문항들의 경우 ‘좋은 국민(good citizen)’이 제시문에 나오고 있어서, 단순히 ‘시민의 의무’ 개념을 넘어서, 좋은 국민이자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규범적 함의가 있기에 이 문항들에 집중하는 것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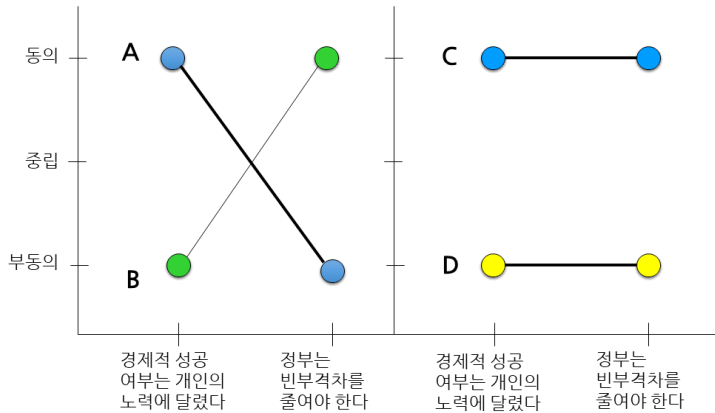
위의 9개 문항들을 앞서의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키면, 투표, 납세, 준법, 정부 문항 등은 베넷이나 달튼이 이야기한 의무적 시민성, 그리고 단체, 공감, 윤리소비, 이타_국내, 이타_해외 등은 베넷이 제시한 자기실현적 시민성이나 달튼이 명명한 관여적 시민성과 비교적 긴밀한 연관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항목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의무적’ 감정에 기초한 것이고 어떠한 항목들이 ‘자기실현’이나 ‘관여’에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들의 성격을 보다 건조하게 고려하여, 각각을 크게 ‘법제도 시민성’과 ‘연대적 시민성’으로 나누어 일컫고자 한다. 즉, 투표, 탈세, 준법, 정부 등 공식적 제도와 관련된 항목들은 법제도 시민성으로, 단체, 공감, 윤리소비, 이타_국내, 이타_해외의 경우 개인의 웰빙을 넘어서 다른 존재들의 안녕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연대적 시민성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는 향후 논의를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수단적 목적의 명명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상관관계 집단분석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분석방법

1) 상관관계 집단분석

이 논문에서 사용한 주된 방법론은 상관관계 집단분석(correlational class analysis)이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사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골드버그(Golberg)의 관계적 집단분석(Relational Class Analysis; RCA)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골드버그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질적으로 다른 인지적 하위집단들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적 집단분석(RCA)이라는 기법을 제시하였다(Goldberg 2011). RCA의 기본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림 1>을 살펴보자.



<그림 1> 태도의 관계적 유사성과 내용적 유사성의 비교

그림에서 A, B, C, D라는 네 명의 사람이 두 개의 설문 문항에 대하여 응답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그들의 응답을 비교하면 A와 B의 태도는 절대적 기준에서는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문항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와 B의 태도는 관계적 특성(*relationality*)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서로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반대되는 태도의 구성은 어떻게 보면 해당 사안을 이해함에 있어 공유하는 근본적인 이해의 구도 혹은 스키마가 유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A를 C나 D와 비교하면, 태도의 ‘내용적 유사성(*content similarity*)’에 있어서는 A는 B보다는 C, D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B와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충돌할 것인 반면, C나 D와는 적어도 어떠한 사안에서는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도의 구조적 측면인 ‘관계적 유사성(*relational similarity*)’의 측면에 있어서는 A는 C나 D보다는 B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RCA는 바로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설문응답자들의 모든 쌍(pair)별로 위와 같은 관계적 유사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관계성(*relationality*)’이라는 지표로써 계산하고,

관계성이 서로 유사한 응답자들을 개별 집단들로 묶어 최종적으로 비교적 작은 수의 하위집단들로 구별해 내는 방법론이다(Goldberg 2011). 태도가 이질적인 집단들을 포착하고 구별해 낸다는 측면에서 RCA는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과 비슷하다. 그런데 LCA가 분석하는 개인들 간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적 유사성’에 있어서의 차이이고, ‘관계적 유사성’은 포착할 수 없다. 관계적 유사성 즉, 스키마 차원의 이질성을 분석하는 RCA는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 있어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나 이해를 분석하는 데에 적용이 되어, 하위집단별 인지적 이질성이 음악 취향(Goldberg, 2011)이나 정치적 태도(Baladassari & Goldberg 2014), 그리고 시장(market)에 대한 이해(DiMaggio & Goldberg 2018)에도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관계성’ 지표를 개념화하고 산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이 후속 연구에서 지적되었고, 부티라인(Boutyline 2017)은 RCA의 그러한 방법론적 전략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부정확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계성 지표를 피어슨 상관계수(correlation)로 바꾸어 사용하면 하위집단들의 스키마를 추출하는 데 불필요한 방법론적 제약을 줄이고 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쉽고 빠르게 산출할 수 있음을 미국 GSS자료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는 이 방법을 상관관계 집단분석(Correlational Class Analysis: 이하 CCA)로 명명하였다.

분량 제약상 부티라인(Boutyline 2017)에서 제시된 방법론의 구체적 사항을 여기서 모두 설명하기는 힘드나, CCA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선택된 설문문항들에 대해, 먼저 모든 응답자 쌍(pair)별로 해당 응답자들의 응답 간 상관관계 값을 계산한다. 즉 k 개의 설문문항을 분석에 투입한다고 하였을 때, 한 쌍의 설문응답자들 간에 응답 상관계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모든 쌍의 응답자에게 반복한다. 그렇게 하면 N 명의 응답자들로 만들 수 있는 $N \times N$ 의 행렬에서 그 행렬의 모든 칸들을 상관관계 계수들로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렬은 연결망 데이터 자료로 취급할 수 있는데, 서로 상관이 높은 응답자들은 연결망에 있어서는 서로 근접한 노드(node)들이 될 것이고, 따라서 서로 태도의 상관이 높은 응답자들은 연결망에서 일종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태도의 상관이 서로 낮은 응답자들은 연결망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를 가질 것이다. 그러한 연결망에서 연결망 분할(network partitioning) 방법을 통해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노드들, 즉 행위자들을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²⁾ 그렇게 해서 전체 연결망을 비교적 적은 수의 하위집단들로

클러스터화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추출된 집단들은 결국 CCA가 발견한, 스키마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이 된다.

CCA와 RCA는 접근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둘 다 그러한 스키마 공유집단을 분석(schematic class analysis)하는 기법이다(Boutyline 2017). 변수 중심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을 택하는 요인분석과 달리, CCA와 LCA 모두 개인 중심 접근방법론(person-oriented approach)이라는 점 또한 공유된다(Bergman & Magnusson 1997).

이 논문에서는 시민적 의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들에 CCA를 적용하여, 사람들이 인식하는 좋은 시민의 책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하위집단별 다양성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은 corclass R패키지(ver.2)를 사용하였다. CCA에서 추출된 4개의 집단들에 대해서는 시민적 의무 문항들의 상관관계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상관관계표와 그것을 연결망화 하여 그 연결망이 어떻게 모듈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다항로짓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어떤 개인수준의 속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 잠재 프로파일 분석

CCA는 문항들 간의 관계적 특성 혹은 구조적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반면, 태도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서로 다른 집단들을 포착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경우 A와 B가 유사한 인지적 스키마를 가지므로 CCA에서는 같은 집단에 포함이 되지만, 그러한 집단 내에서 몇 %의 사람들이 A와 같은지, 그리고 몇 %의 사람들이 B와 같은지를 CCA는 보여주지는 못한다. 즉, 어떤 주어진 문항들에 대해 어떤 응답자들은 모두 다 긍정을 할 수 있고 다른 응답자들은 모두 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응답자들은 CCA에 의해서는 같은 집단에 속하게 된다.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클래식과 힙합에 대한 태도가 각각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안에는 클래식을 좋아하고 힙합을 싫어하는 집단과, 클래식을 싫어하고 힙합을 좋아하는 집단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같은 CCA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매우 다른 이질적 태도를 가진 하위집단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적 의무 인식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틀을 공유하는 각 CCA 집단별로 과연 얼마만큼이나 내

2) 모듈성 극대화(modularity maximization) 방법을 통해 네트워크에서의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방법은 뉴먼(Newman, 2006)의 방법을 따른다.

용상 이질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인수준에서 태도의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잠재집단분석(LCA)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시민적 의무 변수들의 경우 7점 척도인데 LCA를 사용하기 위해 변수들에 변형을 가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정보손실이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를 활용하여 질적으로 다른 범주화된 집단들을 추출하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기법을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CCA에 의해 추출된 각 집단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서로 매우 다른 태도를 가진 하위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LPA를 실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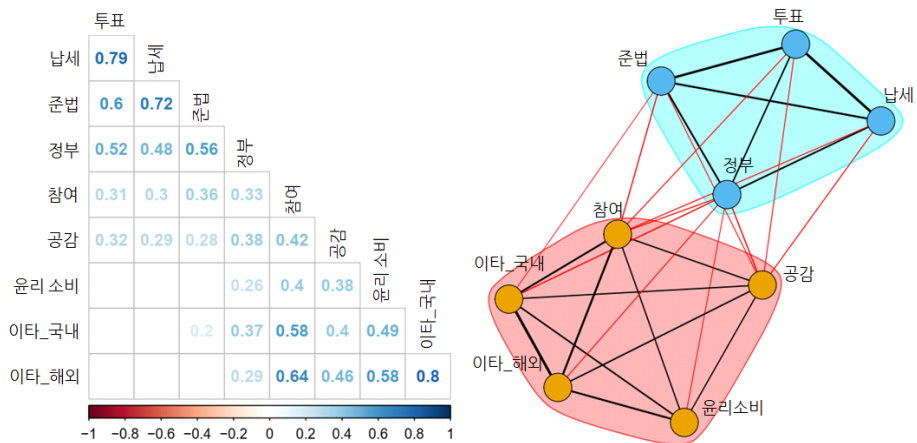
V. 분석결과

아래에서는 CCA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CCA를 통해 4개의 집단(class)이 포착되었다. 즉 시민적 의무 문항들에 대한 태도들 간의 상관관계 구조가 서로 다른 응답자들을 크게 4개의 집단으로 나눈 것이다. 4개의 집단은 그들의 응답 특성에 따라 (1) 이원 구조 집단, (2) 참여제의 집단, (3) 국내중심 집단, (4) 기본윤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들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집단 1: 이원 구조 집단

CCA를 통해 도출된 집단들의 특성은, 무엇보다 각 집단별로 변수들에 대한 응답의 상관관계 패턴이 어떠한 상대적 특징을 보이는지에 주목하여 파악할 수 있다 (Boutyline 2017; Goldberg 2011). 그러한 각 태도 변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강도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각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지닌 인지적 틀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집단의 태도는 <그림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의 좌측은, 9개의 시민적 의무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일 경우($p < 0.05$)만 그 상관관계 계수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의 하단에는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에 따른 색깔과 진하기의 정도가 나타나 있다. 그림의 우측은 9개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의 강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만 서로 링크(link)가 있는 것으로 표현한 연결망 그림이다. 이 연결

망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시각화하기 위하여 연결망의 패턴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내의 ‘커뮤니티’를 추출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그것이 얼마나 모듈(module)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커뮤니티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으로 fast-greedy 알고리즘을 사용(Clauset, Newman, & Moore 2004)하였고, Fruchterman-Reingold 배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실행결과 크게 두 개의 커뮤니티로 모듈화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그림 2> CCA 집단1: 이원 구조 집단

이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는 전체 표본의 약 21.0%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시민적 의무에 대한 이해의 구조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앞서 언급했던 법제도 시민성과 연대적 시민성의 이원적 구조가 이 집단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투표-준법-납세-정부 문항들이 하나로 묶이고, 다른 문항들이 하나로 묶이는 구조이다. 실제로 이 집단만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분명한 두 개의 요인이 포착되었다. 이원적 구조가 이 집단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도 시민성 항목들 사이에서 특히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준법-납세(0.82), 납세-투표(0.79)가 특히 매우 강한 상관을 보인다. 연대적 시민성 문항들 사이에서도 강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타_국내-이타_해외(0.80)가 그렇다. 반면에 상관관계 그

림에서 좌측 하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윤리소비, 이타_국내, 이타_해외 항목들은 법제도 시민성 변수들과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응답자들에게 양자는 서로 별도의 시민성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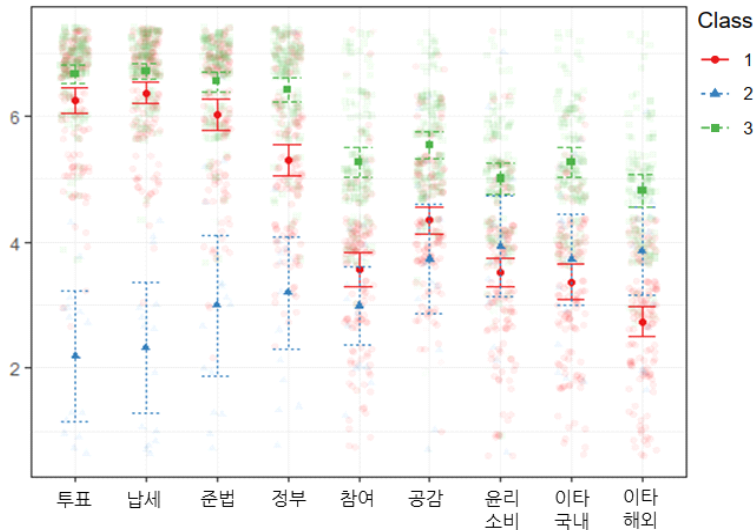
잠재집단분석(LCA)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통해 포착된 이러한 하위집단은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명명이 필요한데, 이 집단은 다른 CCA 집단들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이원 구조 집단’으로 일컫기로 한다.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었던 시민적 의무의 이분법적 구분이 비교적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특히 상관관계표의 좌측 하단에서 두 시민성 종류 간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CCA 집단에 대해 LPA를 실시하여, 이질적 태도를 가진 집단들이 내부적으로 혼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즉, ‘관계적’ 측면에서 비록 같은 인지적 구조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측면에서는 매우 이질적 집단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LPA를 실시하는 목적은 CCA 집단들 내에 존재하는 하위집단들을 엄밀하게 추출하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하위집단들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CCA 집단들 내부에 인지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 혼재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위에서 살펴본 이원 구조 집단에 대하여 LPA를 실시하였다. 분산은 동일한 것으로, 그리고 공분산은 0으로 가정한 가장 단순한 모형을 실행하였다. LCA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개의 집단을 추출하느냐이다. 적합도 지표들을 살펴보면 BIC 값은 5개 집단이 적절함을, AIC 값은 9개의 집단을 추출하는 것이 좋음을 보여주어, LPA를 실행할 시 종종 나타나는 결과처럼 다수의 잠재집단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집단들을 추출한 경우 추출된 집단들 중에서 비율이 5% 이하인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들이 많고, 비록 참조 지표 이진 하지만 개별 관측 값들이 정확하게 분류된 정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 지표의 경우에도 3개 집단을 추출하는 것이 시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IC, BIC 값들 또한 2개의 집단을 추출할 때에 비해 3개의 집단을 추출할 때 감소하는 수치가, 그 이후의 변화량보다 훨씬 큰, 가장 급격한 낙폭을 보였다(부록 참조).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해 아주 정교하게 잠재집단을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CCA 하위집단별로 태도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 이질적인 집단들이 혼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 패턴을 참조하는 것이 주목적이

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개의 집단만을 추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에는 LPA에 의해 도출된 세 집단들의 각 9개의 시민적 의무 문항들에 대한 응답평균과 95% 신뢰수준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응답 원자료가, 사후 집단 확률(posterior class probability)의 크기에 비례하여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도록 시각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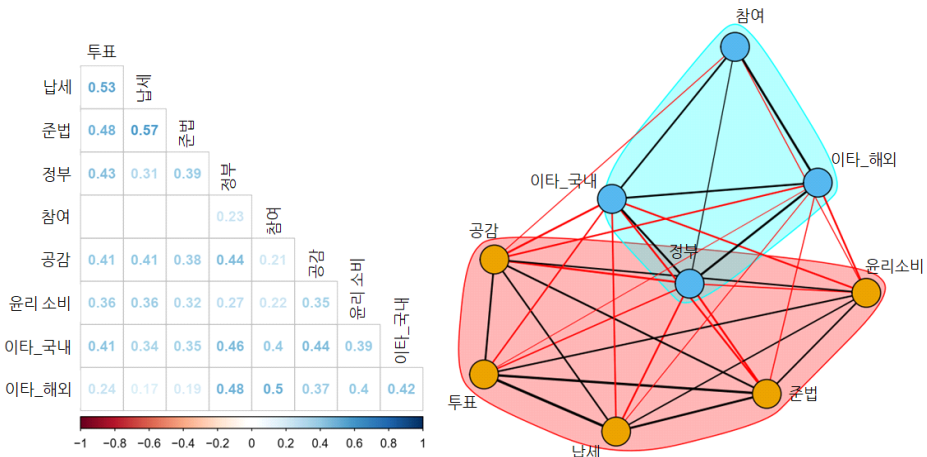
<그림 3> 이원 구조 집단(CCA1)에 대한 LPA 분석결과

여기서 주목할 점은 LPA 집단1, 3의 경우 법제도 시민성에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을 하고, 연대적 시민성에는 덜 긍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집단2의 경우 그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동일 CCA 집단 내부에 태도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 완전히 거울상의 반대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LPA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집단2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8%로 매우 작아, 이 이원 구조 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들 대부분은 법제도 시민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대적 시민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종류의 시민성을 별개로 이해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시민적 의무 관련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들 대부분은 법제도 시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의 방법론적 함의는 이후에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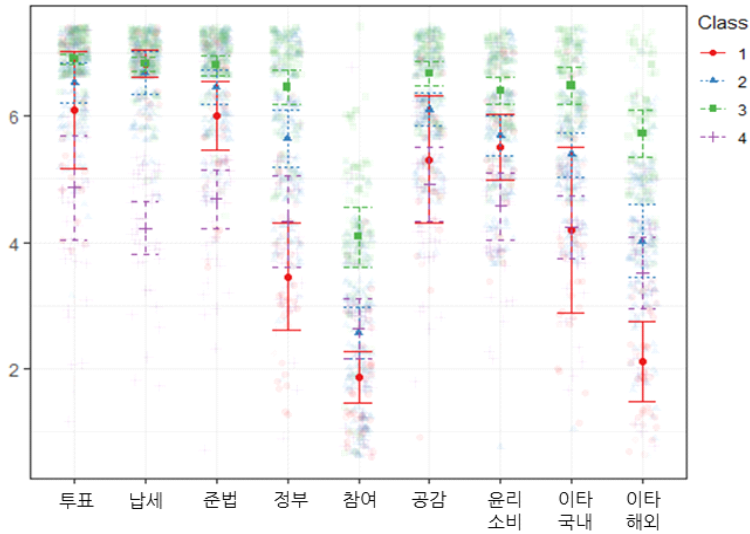
2. 집단 2: 참여제의 집단

다음으로 CCA에 의해 추출된 두 번째 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전체 표본의 약 24.4%이고, 그들이 지닌 태도의 관계적 구조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먼저 상관관계 그림을 보면 이원 구조 집단과는 다르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제도 시민성 문항들 간, 그리고 연대적 시민성 문항들 간 내부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참여’에 대한 태도가 법제도 시민성 관련 문항들과 아주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투표, 납세, 준법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좋은 국민이 되는 데 있어 법제도 시민성이나, 연대적 시민성에 대한 태도를 뚜렷하게 다르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인식의 구조 속에 정치단체나 사회단체에의 참여는 의미있게 구조화 되어 있지 않다. <그림 4>의 우측에 제시되는 연결망의 패턴에서도, ‘참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들은 강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 참여는 비교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 CCA 집단 2: 참여제의 집단



<그림 5> 참여제외 집단(CCA2)에 대한 LPA 분석결과

이 집단에 대한 LPA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5>에 나타나있다. LPA 실시결과 AIC, BIC 등의 적합도는 5개 집단 추출이 적절함을 보여주지만, 그중 한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2.7%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재집단의 성격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4개 집단을 추출하였다. 그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집단의 경우 정치단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국민의 의무라는 것에 대해 훨씬 덜 긍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이 집단은 ‘참여제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³⁾ 단체 참여에 대한 태도가 예외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이 비교적 큰 규모를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좋은 국민’과 ‘단체 참여’라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함의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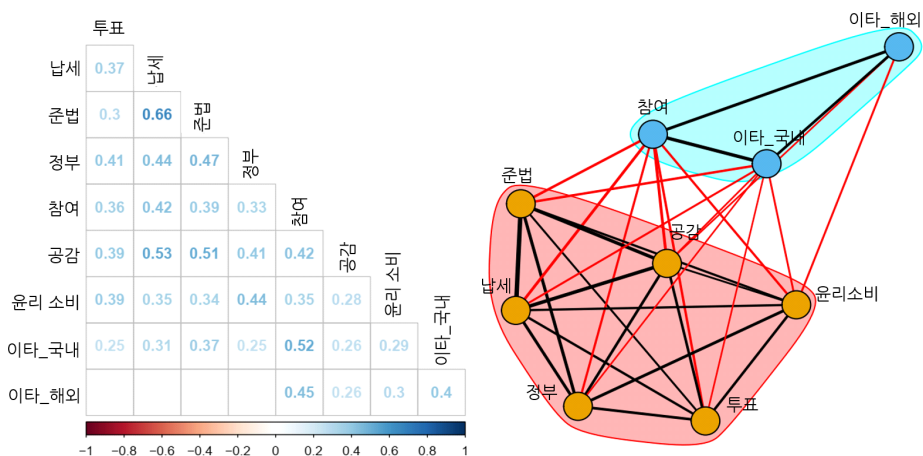
3. 집단 3: 국내중심 집단

다음으로 CCA에 의해 추출된 집단 중 세 번째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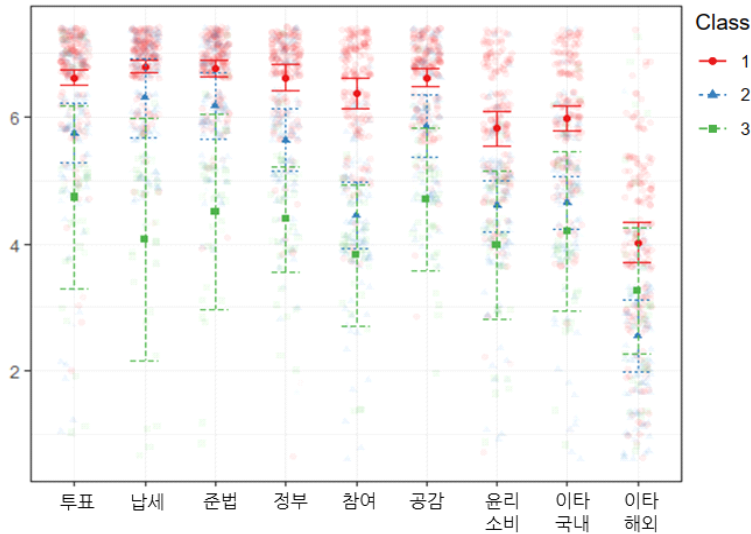
3) <그림 5>를 보면 이 집단의 일부 LPA 하위집단(예: LPA 집단1)의 경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집단은 크기가 비교적 작은 집단이고, 크기가 큰 다른 집단들은 그와 같은 경향을 강하게 보이지 않아 이 CCA2 집단의 강한 특성이라고 묘사하기는 힘들다.

전체의 약 22.7%를 차지하는 이 집단의 경우 항목들이 중간 정도의 연결 강도로 전반적으로 엮여져 있고, 이원 구조 집단에서 보인, 법제도 시민성과 연대적 시민성 각각 내부(intra-domain)의 상관성이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해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문항에 대한 태도가 기타 태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우측의 연결망 그림에서도 이타_해외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동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집단에 대해 LPA를 실행하면 3개의 집단을 추출할 때까지 적합도가 개선이 된 후 4개의 집단을 추출하면서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3개의 집단을 추출하는 것으로 한 결과가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투표부터 이타_국내까지의 8개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응답이 나오는 반면, 이타_해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로 덜 긍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이러한 패턴, 혹은 관계적 특성은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3가지 집단 모두에서 나타난다. 즉, LPA 집단 1-2-3의 9개 문항들에 대한 평균 응답이 대략 상-중-하로 구분될 뿐, 전체적인 관계적 양상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관계의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 정반대의 관계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이 집단은 국내중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6> CCA 집단 3: 국내 중심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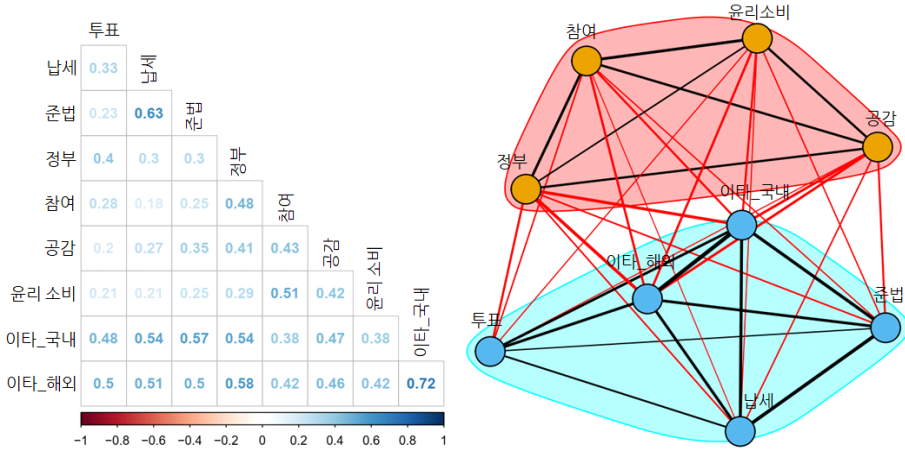


<그림 7> 국내중심 집단(CCA3)에 대한 LPA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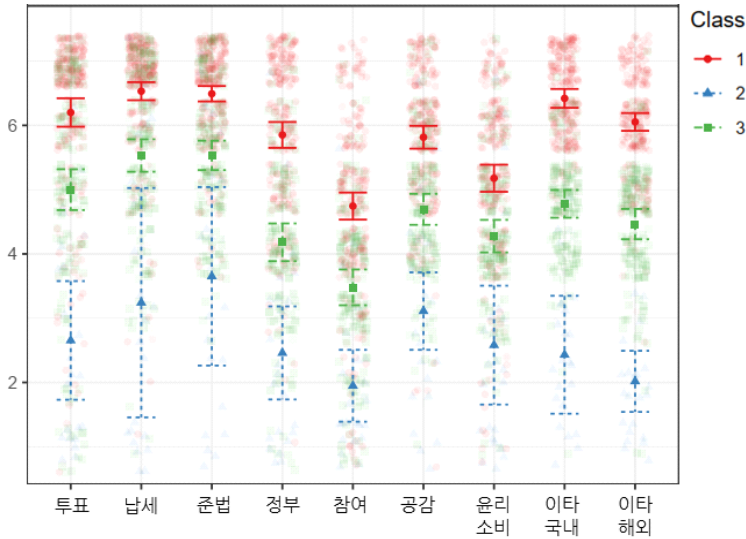
4. 집단 4: 기본 윤리 집단

CCA를 통해 도출된 마지막 4번째 그룹은 전체 표본의 약 32%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큰 집단이다.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태도의 구조적 특성과 LPA를 사용하여 추출한 세부 집단들의 태도적 특징이다.

이 집단의 특징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포착하거나 서술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흥미롭게 관찰되는 지점들이 있다. 첫째로, 다른 집단들과는 달리 어떤 한 항목도 다른 항목들과 동떨어져 있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를 맺지 않아 괴리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모든 항목들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엮여 있다. 둘째, 상관관계의 패턴이 앞서 살펴본 법제도 시민성과 연대적 시민성이라는 이원적 구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결망에서 포착된 집단들의 경우에 ‘정부-참여-윤리소비-공감’이 한 모듈을 이루고, ‘투표-이타_해외-이타_국내-준법-납세’가 다른 한 모듈을 이루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시민성 항목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후자의 모듈이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CCA 집단 4: 기본 윤리 집단



<그림 9> 기본 윤리 집단(CCA4)에 대한 LPA 분석결과

LPA의 경우 AIC나 BIC에 따르면 매우 많은 수의 집단을 추출하는 것이 추천되나, 과잉파라미터화(overparameterized)된 모델에 대해 더 강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CAIC(Consistent AIC; Bozdogan 1987)나 엔트로피 수치의 경우 3개의 집단을 추

출하는 것을 추천하여, 여기에서는 탐색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집단을 시각화하였다. <그림 9>를 보면 앞서 연결망에서 모듈로 각각 묶인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선호되거나 덜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 참여, 공감, 윤리적 소비의 경우 좋은 국민의 의무로서 덜 지지를 받음을 볼 수 있다. 3개의 집단은 근본적인 질적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태도의 강도에 있어 상-중-하로 나눌 수 있는 집단들을 보여준다.

이 집단의 특성을 한 마디로 포착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를 ‘기본 윤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CA를 통해 포착된 이들의 태도의 구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표-준법-납세-이타_해외-이타_국내’가 한 묶음을 이루고 ‘정부-참여-윤리소비-공감’이 다른 모듈을 구성하는데, 이를 평이한 언어로 재구성해보면 전자의 모듈은 ‘법을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로 표현될 수 있는,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상식적인 덕목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모듈에 들어있는 항목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한다거나, 단체들에 손수 참여하고, 비싸더라도 윤리적 상품을 구매하는 등, 기본적 윤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시민적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요구되는 항목들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LPA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집단에 속하는 이들은 ‘적극적인 시민적 실천’보다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항목들에 대해 보다 더 수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이러한 이해는 앞서의 다른 CCA 집단에서 보여진 것들과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 중간 요약 및 방법론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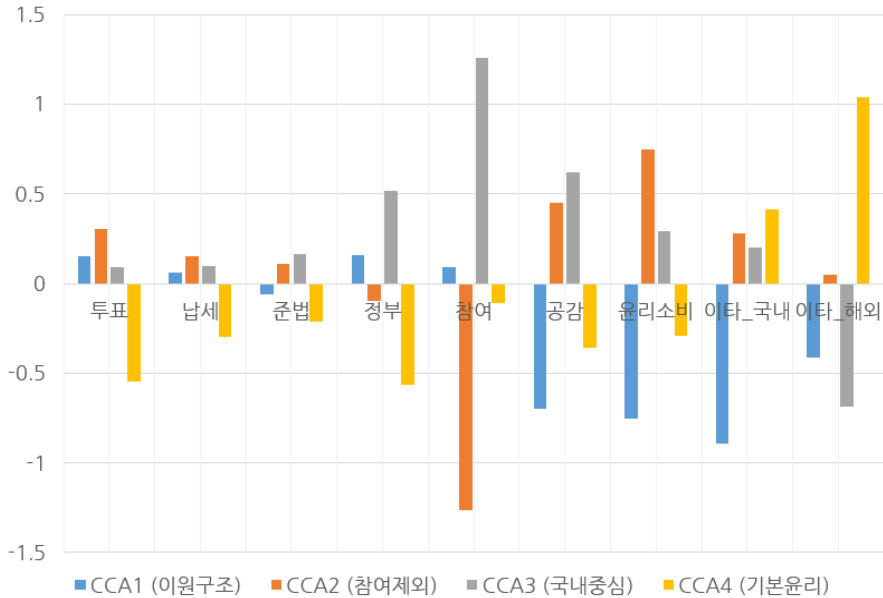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집단분석에 의해 포착된 4개의 집단은 (1) 이원 구조 집단: 법제도 시민성과 연대적 시민성 영역 각각 내부적으로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영역 간 상관관계는 약한 이원적 구조를 보임, (2) 참여제외 집단: 참여 변수가 다른 항목들과 가지는 상관관계가 약함, (3) 국내중심 집단: 해외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의사가 다른 항목들과 가지는 상관관계가 약함, (4) 기본 윤리 집단: 상관관계의 구조적 측면에 있어 ‘정부-참여-윤리소비-공감’이 한 모듈을 이루고, ‘투표-이타_해외-이타_국내-준법-납세’가 다른 한 모듈을 이루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수용적인 인식을 가짐.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에서는 보여주거나 예기치 못한, 시민

적 의무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이해 방식이 실제 개인들의 시민성을 구성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LPA 분석결과는 CCA를 활용하여 얻게 되는 분석결과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CCA나 앞서 언급한 RCA처럼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태도의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론의 경우, 그러한 태도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되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거나(예: 북한에 대한 태도와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 이질적이거나 상충하는 취향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예: 순수예술 선호 대 대중예술 선호),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 추출된 집단 내에는, 절대적 태도에 있어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집단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이슈에 대해 극단적으로 ‘우파’의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그 모든 이슈에 대해 극단적으로 ‘좌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스키마를 공유하는 CCA 집단으로 포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시민성 문항들과 같이, 그러한 대립적 구조를 지닌 항목들이 있는 것이 아닌, 즉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항목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때에는, CCA에 의해 서로 다른 스키마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포착이 된 집단들의 경우, 그 집단들은 절대적인 태도 자체도 비교적 균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태도의 관계적 유사성에 의한 집단 추출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용적 유사성까지도 포착하는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1 내부에서 발견된, 다른 이들과 정반대의 태도를 지닌 작은 집단(i.e., LPA 집단 2)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CCA 집단들에서 그러한 균질성이 나타났다. 앞으로 CCA나 RCA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생각의 구조나 스키마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6. 추가 분석

지금까지 CCA에 의해 추출된 4가지 집단들이, 좋은 시민의 의무에 대해 어떠한 다른 생각과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다룬 4개의 CCA 집단들의 성격을 추가적으로 더 파악해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그림 10>은 CCA 집단별로 9개 문항들에 대한 평균적 태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별로 평균값을 계산한 다음, 각 CCA 집단별 평균이 그 전체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 문항별로 4개의 값들을 더하면 0이 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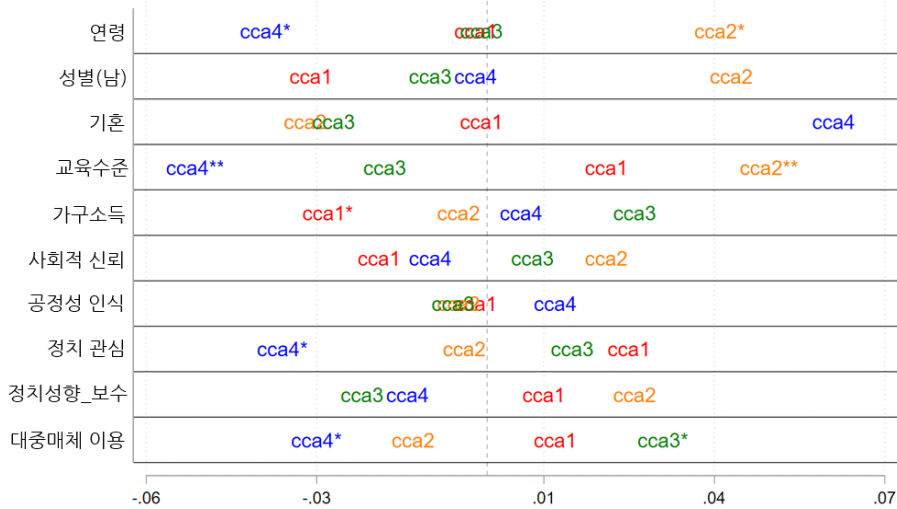


<그림 10> CCA 집단별 평균적 태도의 상대적 비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원구조 집단의 경우 법제도 시민성은 비교적 긍정, 연대적 시민성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덜 긍정적이다. 둘째, 참여제외 집단은 집단의 명칭과 같이 정치·사회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집단의 경우 정치, 윤리,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윤리소비와 참여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특이할 만한 점이다. 셋째, 국내중심 집단은 해외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이나 기타 연대적 시민성 항목들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시민성의 모습이 해외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확장되지 않는 모습이다. 넷째, 기본 윤리 집단은 전체 평균에 비하면 제시된 항목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는 낮으나, ‘나보다 못사는 사람들을 돕는다’에 대해서는 국내, 해외를 가릴 것 없이 상대적으로 긍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타_해외 항목에 대해서

- 4) CCA에 의해 도출된 집단들의 경우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의 차이, 즉 인지적 스키마의 차이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것이므로, 응답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LPA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각 CCA 집단들이 대체로 내부적으로는 유사한 태도적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가 의미있다고 판단하였다.

는 타집단들에 비해 매우 긍정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CCA 집단 소속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의 한계효과

주: CCA1: 이원 구조 집단, CCA2: 참여제외 집단, CCA3: 국내중심 집단, CCA4: 기본윤리 집단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어떠한 개인수준의 변인이 시민적 의무와 관련된 태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4개의 CCA 집단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1>의 X축은 각 독립변수의 평균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CCA 집단을 나타내는 표기의 위치가 각 독립변수가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하였다. 더미변수(i.e., 성별, 기혼)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표준화 하였다. 통계적 유의도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수준 변수로서,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참여제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기본윤리’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윤리’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을수록,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이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그 반대일수록 ‘기본윤리’를 기초로 한 스키마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거나, 연령이 높아지면 ‘참여제

외'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대중매체를 많이 사용할수록 '국내중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들은 매우 큰 차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약간의 영향을 준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다.

VI. 결론

한국사회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복합위기 사회로 진입하고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 꾸준히 해체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토양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성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자유주의부터 공화주의, 공동체주의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보호부터 시민적 덕목의 실천을 통한 시민들의 자아실현까지 다룰 수 있는 시민성 개념의 철학적 넓이와 개념적 유용성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근대적 국가의 건설과정에서 끊임없이 '국민'으로서 호명을 받았던 한국의 개인들이 보다 더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공공의 영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이 논문은 그러한 시민성 개념의 중심요소 중 하나인 시민적 의무, 특히 좋은 시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덕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성 인식 체계들을 드러내고 그것의 개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KGSS의 시민성 문항들을 활용하여 태도나 스키마에 있어서의 관계적 유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관관계 집단분석 기법(CCA)과 내용적 유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기법을 같이 활용하여, 좋은 시민이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CCA는 그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4가지 집단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는 법제도 시민성과 연대적 시민성을 별개로 인식하는 이원 구조 집단, 대부분의 시민적 의무들을 유사한 정도로 긍정하나 정치·사회 단체 참여는 별개로 생각하는 참여제의 집단, 다양한 시민적 의무들에 대해 비교적 긍정하지만 그것의 방향성이 국내에만 맞추어져 있는 국내중심 집단, 마지막으로 법을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민성은 긍정하지만, 그 이상의 적극적인 실천에는 덜 긍정하는 기본 윤리집단의 네

가지 집단이 추출되었다.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시민적 의무 인식의 다양성과 인지적 구조의 특성들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의 시민성 관련 이론적 논의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일반인들이 시민적 의무에 대해 생각하는 문화적 논리가 CCA에 의해 포착된 결과에 나타난다. 많은 시민성 관련 논의들이 준법이나 투표 등 법제도와 관련된 의무적 시민성을 넘어서는 더 폭넓고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는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그와 같은 이분법적 인지적 틀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비율은 21%에 그친다. 그 외의 시민들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참여를 다른 종류의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해외와 관련된 것을 예외로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 윤리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하는 인지적 구성의 논리를 보여준다. 즉, 이론적 논의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민성 인식 논리의 다양성이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 중 약 1/4이 참여제외 집단에 속한다는 결과는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시민적 의무 인식에 있어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발적인 단체 참여라는 것이 서구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적 시민의 실천행위로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다면, 한국사회에서는 단체 참여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어 ‘좋은 국민’으로서의 행위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는 것이다. 사실 ‘참여’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비판적 물음은 에치오니(Etzioni) 등을 위시한 사회철학자들도 제시한 바가 있다(Etzioni 2001). 어떠한 단체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 단체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것의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성찰없이 무조건적으로 시민 참여가 좋은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체 참여’라는 표현이 가지는 이와 같은 긴장감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시민성 논의에 있어 보다 더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제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약간 높여준다는 점이 특히 관심을 요한다.

이 논문에는 분량 관계상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들과 그로 인한 한계점이 몇 가지 있다. CCA를 통해 발굴된 4가지 종류의 시민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론적 논의, 그리고 그러한 한국인들의 시민성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와 같이 형성되었는지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울러 KGSS 2004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분석결과와 상당히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었는데, 분량 제약상 여기에 소개하지는 못하였다. ISSP 자료를 활용한 국가 간 비교 또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를 통해 종단비교와 국가 간 비교를 실

시하여 한국 시민들의 시민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지범·강정한·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운석·최성수·최슬기·김솔이. 2019. 《한국중
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악셀 호네프 저, 문성훈·이현재 역. 2011. 《인정투쟁-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책.
- 이선미. 2016. “시민성 관점에서 본 자원활동: 새로운 유형과 관점.” 《NGO연구》 11(1):
57-83.
- 조철기. 2016.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 등장 국가 시민성에서 문화적 시민성으로”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22(3): 714-729.
- 진보미. 2017. “한국인의 시민성 유형과 정치참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
위 논문.
- 최문선·박형준 (2015)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형 디지털 시민성 척도 타
당화 연구.” 《시민교육연구》 47(4): 273-297.
- Baldassarri, D. and A. Goldberg. 2014. “Neither Ideologues nor Agnostics: Alternative
Voters’ Belief System in an Age of Partisan Politic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0(1): 45-95.
- Boutyline, A. 2017. “Improving the Measurement of Shared Cultural Schemas with
Correlational Class Analysis: Theory and Method.” *Sociological Science* 4(15):
353-393.
- Bozdogan, H. 1987. “Model Selection an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The
General Theory and Its Analytical Extensions.” *Psychometrika* 52: 345-370.
- Clauset, A., M.E. Newman, and C. Moore. 2004. “Finding Community Structure in
Very Large Networks.” *Physical Review E* 70: 066111.
- Dagger, R. 1997. *Civic Virt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J. 2008.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CQ Press.
- DiMaggio, P. 1997. “Culture and Ogni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1):
263-287.

- DiMaggio, P. and A. Goldberg. 2018. "Searching for Homo Economicus: Variation in Americans' Construals of and Attitudes toward Markets."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59(2), 151-189.
- Etzioni, Amitai. 2001. *The Monochrome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ldberg, A. 2011. "Mapping Shared Understandings Using Relational Class Analysis: The Case of the Cultural Omnivore Reexamin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6(5): 1397-1436.
- Gyárfášová, O. 2017. "What Is the Public Perception of What It Means to Be a Good Citizen? Empirical Evidence from Slovakia." *Human Affairs* 27(3): 317-332.
- Kim S. and J. Yang. 2013. "Patterns of Citizenship and Political Action in Korea,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 Analysis of the 2004 ISSP Data." in Pohlmann M., J. Yang, and J.H. Lee.(eds) *Citizenship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ranscultural Research-Heidelberg Studies on Asia and Europe in a Global Context* vol 5. Springer, Berlin, Heidelberg.
- Marshall, T.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of T.H. Marshall*. Westport, CT: Greenwood.
- Matten, D. and A. Crane. 2005. "Corporate Citizenship: Toward an Extended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1): 166-179.
- Newman, M. 2006. "Modularity and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3(23):8577-82.
- Pammett, Jon(ed.). 2016. *ISSP 2014-Citizenship II: Questionnaire Development Report*. Ottawa.
- Tilly, C. 1996. *Citizenship, Identity and Social History*. Cambridg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Vandenberg, A. 2000. "Contesting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a Global Era". in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a Global Era*. Andrew Vandenberg(ed.), 3-17. London: Macmillan.
- Zerubavel, E. 1997. *Social Mindscapes: An Invitation to Cognitive Sociology*.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 Zerubavel, E. 2007. "Generally Speaking: The Logic and Mechanics of Social Pattern Analysis." *Sociological Forum* 22: 131-45.

Who Are the ‘Good Citizen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opular Perceptions of Civic Obligations

Dong-Kyun 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popular perceptions of civic obligations, particularly the ones recognized to be fulfilled by ‘good citizens.’ The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various kinds of perceptions and understanding of citizenship and shows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Employing the 2014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and using correlational class analysis as the methodological strategy, this paper systematically analyzes popular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ies that ‘good citizens’ bear.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broadly four distinct, heterogeneous ways of perceptions of civic obligations, which are identified by correlational class analysis. The first group, titled ‘dual structure group’, possesses perceptions that are structured along the two distinct dimensions of citizenship, which are legal-institution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citizenship. The second group, titled ‘all-but-participation’ group, regards most civic obligations as important and essential except for participation in civic and political organizations. The third group, titled ‘domestic-oriented’ group, focuses on civic obligations mostly within domestic contexts. The final group, titled ‘basic values’ group, thinks obligations related to basic duties as important but sees more active duties as less essential. These findings reveal the diversity of popular perceptions of civic duties, which are undetected by previous scholarship.

Key words: citizenship, civic obligations, correlational class analysis, latent profile analysis

부록

<표 1> 시민적 의무 문항 기술통계

(N=1,223)

변수 명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투표	5.98	1.48	1	7
납세	6.19	1.28	1	7
준법	6.12	1.19	1	7
정부	5.45	1.53	1	7
참여	4.13	1.74	1	7
공감	5.52	1.31	1	7
윤리소비	4.93	1.47	1	7
이타_국내	5.16	1.46	1	7
이타_해외	4.23	1.63	1	7

<표 2> CCA 집단별 잠재 프로파일 분석(LPA)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1. 이원 구조 집단

잠재집단 수	LogLik	AIC	BIC	CAIC	SABIC	엔트로피	BLRT (P-value)
2개	-3738.84	7533.67	7633.05	7661.05	7544.28	0.804	0.010
3개	-3493.61	7063.22	7198.09	7236.09	7077.62	0.895	0.010
4개	-3432.27	6960.54	7130.90	7178.90	6978.73	0.860	0.010
5개	-3373.77	6863.53	7069.38	7127.38	6885.50	0.862	0.010
6개	-3353.95	6843.90	7085.23	7153.23	6869.65	0.858	0.010
7개	-3308.24	6772.47	7049.30	7127.30	6802.02	0.871	0.010
8개	-3290.51	6757.03	7069.35	7157.35	6790.36	0.870	0.020

2. 참여제의 집단

잠재집단 수	LogLik	AIC	BIC	CAIC	SABIC	엔트로피	BLRT (P-value)
2개	-4125.23	8306.47	8409.99	8437.99	8321.19	0.966	0.010
3개	-4006.07	8088.13	8228.62	8266.62	8108.11	0.833	0.010
4개	-3969.90	8035.80	8213.26	8261.26	8061.04	0.803	0.010
5개	-3906.06	7928.13	8142.56	8200.56	7958.62	0.829	0.010
6개	-3901.80	7939.59	8190.99	8258.99	7975.34	0.831	0.881
7개	-3891.28	7938.56	8226.93	8304.93	7979.57	0.821	0.139
8개	-3838.07	7852.13	8177.48	8265.48	7898.40	0.854	0.010

3. 국내중심 집단

잠재집단 수	LogLik	AIC	BIC	CAIC	SABIC	엔트로피	BLRT (P-value)
2개	-3884.05	7824.10	7925.57	7953.57	7836.79	0.871	0.010
3개	-3785.26	7646.52	7784.23	7822.23	7663.74	0.834	0.010
4개	-3780.46	7656.92	7830.88	7878.88	7678.68	0.802	0.842
5개	-3655.71	7427.41	7637.61	7695.61	7453.70	0.840	0.010
6개	-3645.59	7427.18	7673.62	7741.62	7458.00	0.844	0.218
7개	-3608.28	7372.56	7655.23	7733.23	7407.90	0.863	0.010
8개	-3586.12	7348.24	7667.15	7755.15	7388.12	0.856	0.010

4. 기본윤리 집단

잠재집단 수	LogLik	AIC	BIC	CAIC	SABIC	엔트로피	BLRT (P-value)
2개	-5973.38	12002.76	12113.89	12141.89	12025.04	0.853	0.010
3개	-5778.41	11632.83	11783.64	11821.64	11663.07	0.896	0.010
4개	-5746.87	11589.74	11780.24	11828.24	11627.93	0.787	0.010
5개	-5674.14	11464.27	11694.46	11752.46	11510.43	0.821	0.010
6개	-5597.92	11331.84	11601.71	11669.71	11385.95	0.880	0.010
7개	-5579.47	11314.94	11624.50	11702.50	11377.01	0.867	0.010
8개	-5561.27	11298.53	11647.78	11735.78	11368.56	0.828	0.010

<표 3> CCA 집단별 하위 LPA 집단들의 항목별 응답 평균

이원구조 집단(%)	투표	납세	준법	정부	참여	공감	윤리소비	이타_국내	이타_해외
집단1 (51.4%)	6.24	6.37	6.02	5.28	3.55	4.36	3.48	3.38	2.75
집단2 (5.8%)	2.20	2.33	3.00	3.20	3.00	3.73	3.93	3.73	3.87
집단3 (42.8%)	6.67	6.71	6.56	6.45	5.31	5.54	5.06	5.29	4.84
참여제외 집단(%)	투표	납세	준법	정부	참여	공감	윤리소비	이타_국내	이타_해외
집단1 (12.1%)	6.14	6.83	6.03	3.42	1.75	5.36	5.56	4.11	1.92
집단2 (45.6%)	6.51	6.67	6.44	5.59	2.54	6.05	5.66	5.36	4.04
집단3 (27.9%)	6.92	6.82	6.81	6.51	4.19	6.71	6.39	6.54	5.75
집단4 (14.4%)	4.84	4.23	4.70	4.35	2.63	4.93	4.58	4.23	3.51
국내중심 집단(%)	투표	납세	준법	정부	참여	공감	윤리소비	이타_국내	이타_해외
집단1 (56.0%)	6.60	6.79	6.75	6.61	6.36	6.62	5.83	5.99	4.03
집단2 (31.8%)	5.77	6.28	6.18	5.61	4.39	5.82	4.52	4.59	2.48
집단3 (12.3%)	4.65	4.09	4.50	4.38	3.85	4.71	4.00	4.18	3.26
기본윤리 집단(%)	투표	납세	준법	정부	참여	공감	윤리소비	이타_국내	이타_해외
집단1 (52.2%)	6.20	6.54	6.50	5.86	4.76	5.82	5.18	6.45	6.07
집단2 (5.9%)	2.61	3.26	3.65	2.43	1.91	3.09	2.52	2.39	1.96
집단3 (41.9%)	5.01	5.52	5.52	4.18	3.46	4.70	4.28	4.76	4.46